

보도 일시	2022. 11. 7.(월) 09:00	배포 일시	2022. 11. 7.(월)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정미 (044-203-2611)
		담당자	사무관 김자영 (044-203-2607)

새 정부 문화도시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 11. 9. '새 정부 문화도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1월 9일(수) 오전 11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새 정부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견 수렴회를 열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등, 총 18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11월 말, 새 정부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 예정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문화도시 제1단계('18~'22년)를 넘어 제2단계('23~'27년)를 준비해 왔으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담은 '새 정부 문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체부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이 '새 정부 문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계획(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는 이번에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의견 수렴회에는 전국 지자체와 지역문화 관련 기관 관계자,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는 11월 8일(화)까지 지역문화진흥원 문화도시 담당자에게 전자우편(coc@rcd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문화도시 제1단계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한계와 문제점은 수정한 새 정부 문화도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전국 지자체, 지역 문화 관련 기관, 지역문화 관련 전문가 등 지역문화 주체들이 새 정부 문화도시 발전적 방향을 제안해 주었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라며, “새 정부 문화도시 정책으로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문화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새 정부 문화도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회 참가신청서 양식

